

IPEF 9월 장관회의 세부 내용 및 현지 반응

- ◆ 이번 회의를 통해 합의된 IPEF 4개 주요 의제의 세부 내용을 공개
- ◆ 무역 장벽 완화와 디지털 무역 규정 합의로 중소기업 실적 증대 전망
- ◆ 각국의 자국 산업 보호 노력에 따라 달성 가능한 성과에 한계 존재

I. 회의 개요

- 인도·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(IPEF) 장관회의 개최(9.8~9일)
 -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이틀간 진행된 회의에 총 14개국 관료 참여
 - 참여국 : 미국, 한국, 일본, 호주, 뉴질랜드, 말레이시아, 인도, 인도네시아, 싱가포르, 필리핀, 태국, 베트남, 브루나이, 피지
 - IPEF는 '22.5.23일 출범한 미국 주도의 인도·태평양 경제협의체
 - 바이든 행정부는 IPEF를 '가치 동맹'으로 고려하며, 레이먼드 상무부 장관은 지역 내 미국의 경제 리더십 회복과 중국 영향력 견제를 목표로 언급
 - 한편, 많은 IPEF 참여국은 IPEF를 중국을 배제한 시장 대안 모색보다 인도-태평양 지역 내 새로운 기회 발굴을 희망하는 것으로 언급
 - 이에 따라, 이번 장관회의의 주요 목표는 주최국인 미국과 13개 참여국 간 이전 조율 및 협력 과제 검토로 분석됨.
- 회의 종료 후 공동합의문을 통해 협의 안전 공개
 - 4개 주요 의제(Pillar)에 대한 공동 정책 방향을 담은 각료선언문 채택을 합의했으며, 최종적인 세부 내용 조율은 '23년 11월까지 이어질 전망
 - 돈 패럴 호주 통상부 장관은 이후 일정에 대해 올해 11월 원격 장관급 회의 소집 가능성을 언급했으며, '23년 1월 대면 회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

II. 4개 주요 의제 세부 내용

- 주요 의제는 (1) 무역, (2) 공급망, (3) 청정 경제, (4) 공정 경제
- ① 무역(Connected Economy-Trade)
 - 다양한 무역 규범 정립과 협력 의제 논의
 - 국제 노동 규범 준수, 친환경·저탄소 교역 강화, 디지털 교역 활성화, 식량안보 대응 및 농업 기술혁신, 통관절차 개선, 공정경쟁 기틀 마련, 무역원활화, 포용성 강화
 - * 인도 정부는 자국 노동·환경 정책 보호를 이유로 무역 관련 조항 참여를 거부
- ② 공급망(Supply Chains)
 - 국제 공급망 병목현상 해결 및 안정화 협력
 - 핵심 분야·품목 선정 기준 합의, 핵심 분야·품목의 탄력성 투자 확대,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정보공유·조기경보 공조 체계 마련, 공급망 내 운송경로 원활화, 공급망 내 노동권 증진
- ③ 청정 경제(Clean Economy)
 - 파리협정에 기반한 기후변화 공동 대응 강화
 - 에너지 안보 협력 및 전환 필요성 강조, 온실가스 배출 감축,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, 토양·수질·해양 보존 강화, 청정에너지 전환 인센티브 논의
- ④ 공정 경제(Fair Economy)
 - 교역·투자 확대를 위한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 노력
 - 반부패 협약 이행, 조세 투명성 강화, 공정성 강화 관련 기술·정책 교류, 민간 기관의 감독·정보 교류 허용

III. 현지 반응

□ 인도의 무역 의제 불참 논란 진화

- 미국 관료들은 인도의 무역 의제 불참을 '참여국 권리 보장 사례'로 언급
 - 현지 언론은 인도의 무역 의제 불참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지만, 이의 분야에서 이탈 없는 합의안이 도출된 사실은 긍정적으로 평가
 - 최근 인도는 러시아산 석유 수입 제한 등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정책 참여도가 낮아, 對 중국·러시아 정책 효율 제고를 위해 협력 인센티브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
 - 중국 글로벌 타임스(Global times)는 '중국을 배제한 공급·산업망 구성은 비현실적인 목표'라고 비판하며, 인도의 무역 의제 이탈을 지지

□ IPEF가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

- 글로벌 혁신포럼(GIF) 보고서는 IPEF가 중소기업이 직면한 5대 수출 장벽을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
 - 무역원활화와 통관절차 개선이 (1) 관세·통관절차, (2) 면허·규제 불확실성, (3) 운송 비용, (4) 해외 고객과의 소통 부족, (5) 해외 마케팅 정보 부족을 개선할 것으로 전망
 - 개인정보 보호 강화, 면허 취득 절차 간소화, 일관된 데이터 전송 규칙, 법률·규정에 대한 투명성 강화는 미국-인·태 중소기업 간 디지털 거래를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
- IPEF 디지털 무역협정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실적 증대를 전망
 - 디지털 무역협정으로 미국 경제 생산량이 3년 동안 72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으며, 미국 중소기업의 수출 매출은 35~44%, 인·태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매출은 30~37% 증가할 것으로 예상

□ 비관세 장벽 완화에 높은 기대

- 미국 농업·무역 정책연구소(IATP)는 IPEF가 농산물 관세 조정보다 기술 장벽(TBT)과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(SPM) 완화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
 - 일례로, 한국은 농산물 생명공학 기술 규제를 다른 5개 기관이 각자의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은 반복적인 정보 제공과 지연되는 검토 과정에 대해 피로를 호소
 - 유전자변형 식품(GMO) 등 기술 및 식품위생에 민감한 품목의 통관절차 기준을 미국과 같은 수준의 '과학 기반 시스템'으로 합의하면 농산물 무역과 관련된 비관세 장벽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

□ IPEF의 지속 가능성(durability) 확보 강조

- 국제전략연구소(CSIS)를 비롯한 현지 연구기관들은 미국이 IPEF를 지속해서 추진할 의지를 분명히 표명해야 진전이 있을 것으로 조언
 - '24년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할 경우, IPEF 체제 존치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공유
 - 특히, 청정에너지 분야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간 관점이 크게 달라 11월 중간 선거 이후 추진 동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상존

□ 4분기 예정된 미국·대만 무역 협상에 관한 관심 증대

- 미국은 IPEF 참여국 확대를 위해 대만의 참가를 배제한 보상으로 '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-대만 이니셔티브'를 발족('22.6월)
 - 미국 무역대표부와 대만 경제무역협상공실은 반부패, 디지털 무역 표준, 노동권, 환경기준, 비시장 접근 관행 등 11개 의제에 대한 회담을 4분기 초 추진할 전망
 - 많은 전문가는 미국-대만 경협회담이 IPEF와 같은 수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평가하며, 4분기 미·대만 경협 성과를 통해 11월 논의될 2차 IPEF 장관회의 내용을 전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IV. 시사점

□ 행정협정(executive agreement) 형식 선호

- 사라 비앙키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참여국들이 행정명령 형식의 IPEF 추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언급
 - 미국 의회 승인 과정 생략이 IPEF 합의 내용에 대한 의회 승인 여부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합의 완료 시점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
- 의회 승인 생략 시, 법률개정이 필요한 분야에서의 성과 창출에 난항 전망
 - 관세, 세제, 기후, 노동권 등 주요 논의 분야에 대해 구속력이 없어, 상징적인 협의체로 전락할 우려 존재
 - 필리핀, 호주 등 일부 국가들은 자발적 참여가 원칙인 IPEF가 제재를 통한 구속보다 인센티브를 활용한 독려를 기반으로 구축되는 것을 지지함에 따라, 향후 참여 인센티브 논의가 주요 안건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큼

□ 한국은 반도체·배터리 공급망 수혜 전망

- IPEF 내에 자원 부국과 기술 보유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어, 국내 첨단 산업 공급망 탄력성 강화 기회로 고려됨.
 - 공급망 의제에 포함된 '유사시 참여국 간 재고 교환' 방안은 미국 핵심 광물안보 파트너십(MSP)과 더불어 국내 산업계의 공급망 다변화·안정화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큼.
 - 반도체, 배터리 원재료 공급망은 IPEF 내 주요국들이 모두 관심이 있는 품목인 만큼,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정보공유·조기경보 공조 체계가 가장 원활하게 작동할 전망
- IPEF 내 데이터 무역 규범 논의도 수혜 분야로 전망됨.
 - 데이터 이동과 콘텐츠 수출입 관련 표준이 디지털 무역 내에 합의된다면 최근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한국 콘텐츠의 수출 및 보호가 용이해질 전망

□ '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' 추진 노력에는 한계 존재

- 미국은 IPEF를 통해 자유무역 체제 강화를 주장하는 동시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(IRA) 등 자국 우선주의 정책도 강화 중
 - 일부 현지 언론 및 전문가들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가 지지율 상승을 위해 무리한 메이드 인 아메리카(Made in America) 정책을 추진하여 무역상대국과의 신뢰도가 하락 중인 것으로 평가
- 현지 산업단체들의 주요 부처에 대한 압박은 가중될 전망
 - 미국 상공회의소에 따르면, 현지 제조업, 농업 단체들은 IPEF 내에 각 산업에 유리한 조항을 반영하기 위해 무역대표부와 상무부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강화 중
 - 한편, 다른 IPEF 참여국들도 미국과 같이 자국 산업에 대한 위협성을 줄이기 위해 독소조항 검토와 산업 의견 청취에 노력하고 있어, 최종본에 실효성 없는 '일반적이고 안전한 조항'만 채택될 우려도 제기됨.

[자료원] 미국 백악관·무역대표부·상무부 보도자료, 국제전략연구소, 농업·무역 경제연구소, 미국 상공회의소, Bloomberg, Inside Trade, NYT 및 KOTRA 워싱턴무역관 보유자료 / 끝